

## 安全管理의무 下都給공사 확대

### —노동부, 産災豫防 중점推進사항—

#### 대형 現場 안전진단 工種범위도

3人以上 死亡災害 영업정지 등 제재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 원도급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대상 공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형건설현장의 안전진단실시 공중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南載熙 勞動부장관은 45개 지방노동청과 12개 지방산업안전관리공단 등 전국 산업안전보건관계자 회의를 주재, '災害率 1% 미만 달성을 위한 産災豫防특별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을 지시했다.

南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原都給者가 △ 구조물 붕괴위험장소 △ 기계등 전도위험장소 △ 비계·거푸집설치나 해체장소 △ 리프트운행장소 △ 굴착이나 발파작업장소 △ 추락위험장소 등 하도급업체가 종사하는 작업현장에도 자사소속 근로자와 같은 안전의무조치를 취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진단실시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 철도·도로 등 주요 구조물을 관통 또는 인접해 지하 10m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와 총연장 50m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공사, 총연장 200m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공사에도 기존 중대재해발생사업장과 같이 産災의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저감과 관련, 南장관은 공사금액 20억원미만 공사현장의 재해 예방체제구축을 위해 시공자가 안전관리비를

사용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라고 말했다.

勞動部는 이날 회의에서 建設業體가 3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入札참가자격을 4~12개월 수준으로 제한시키거나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취하는 등 중대건설재해에 대해 강력 제재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勞動部는 이달 중순부터 공사금액 20억미만 전국 3천700여개소 건설현장의 소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日刊建設 4월 11일자〉

## 노동부 '93년도 산업재해 발표

'93년도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액이 GNP의 약 1.7%(4조 3천억)에 이르는 등 여전히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에서 발생한 재해가 전체 산업재해의 73.5%를 차지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3년도 전산업현장에서 대소의 각종 사고로 인해 모두 90,288명이 재해를 입었으며 이중 2,2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92년도 재해자 107,435명, 사망자 2,429명 대비 각각 17,147명, 219명이 감소된 것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재해감소추세가 가장 뚜렷하여 재해자와 사망자가 '92년도 대비 각각 10,026명, 212명이 감소했으며 재해율도 1.44%를 기록 '92년도 대비 무려 0.46%나 감소했다.

따라서 산재보상금 지급액이 '64년도에 산재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약 590억원 감소했으며 경제적 손실액도 136백억원

으로 '92년도 대비 3,000억원이 감소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은 GNP 1.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93년도 재해를 1.30% 역시 일본 0.39%, 영국 0.7% 등 선진국 대비 2-4배나 높은 실정이다.

〈산업안전신문 4월 18일자〉

## 산재예방조직 改編음직임

### 산재예방協會 신설 敎育訓練 전담

안전協·産保協 신설 協會 회원으로

「재해예방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研究報告書 강력 주장

산업안전보건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 기존의 산재예방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편방안으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이원화하여 규제 및 감독업무는 기존의 공단 성격의 기관이 맡고, 순수산재예방 관련활동은 반관반민성격을 가진 협회나 기구(가칭 산업재해예방협회)를 새로 설립, 담당토록 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대한산업보건협회는 회원사로 포함시켜 예방관련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을 들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한 「산업재해예방조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심도있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업무의 상당부분이 정부로부터 위탁된 규제 내지 지도업무이므로 산업안전감독관과 공단기술지도원을 차별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이는 산재예방에 있어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일본의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와 같은 협회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런데 이같은 개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설된 협회나 기관을 포함한 두 기관의 임원과 예산은 현재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보고서는 산업재해예방협회(가칭)는 기존의 대한산업안전협회나 산업보건협회 등도 회원사로 포함, 예방단체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해야 하고 신설되는 산업재해예방협회는 기존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배제하는 안되 중소기업의 산재예방활동을 도와주고 특히 교육·훈련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재해신문 5월 16일자〉

## 건설재해 1/4분기 사망자수 급증

—소규모 현장·붕괴재해 크게 늘어—

공단, 저비용기법 보급등 지원 강화

올 1/4분기중의 건설재해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공단이 발표한 비공식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4분기동안 발생한 건설재해 사망자수는 모두 81명으로 지난해 65명보다 12% 정도 늘어났다.

특히 이같은 사망재해는 50억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급증추세를 보여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전년도 37%에서 크게 증가된 60%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공단은 또 올해 1/4분기 노동부 비공식 집계결과 전년동기와 비교해 2.31에서 1.95로 약 16%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년의 경우 1/4분기중의 산재가 뒤늦게 집계됐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폭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1/4분기 공단이 조사한 중대재해 70건을 발생형태별로 보면 추락재해가 52%로 여전히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붕괴재해는 전년도 4.8%에서 올해는 13.6%로 급증, 추락에 이어 두번째로 발생건수가 많았다.

붕괴재해 역시 대부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안전공단은 이러한 재해증가추세를 막기 위해 50억미만 중소현장에 대해 안전점검 및 기술자료 정보제공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중대재해속보 및 사례집 등의 보급대상을 확대, 업체 자율안전관리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 산재예방기법 보급사업을 강화, 건설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한 분위기 쇄신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산업안전신문 5월 23일자〉

## 안전사각지대 관리감독 강화시급

—광운대 이흥 교수 「건설재해 발생원인」 논문

조기준공 · 이윤급급이 재해유발—  
안전관리조직 존재여부도 변수

국내 건설업에서의 재해발생은 재해감독기관의 안전감독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광운대학교 경영학과 이흥 교수는 최근 산업안전학회지에 발표한 「건설산업재해 : 탐색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국 5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추출,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번 논문에서李교수는 『아직도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경우 외부감독기관에 의한 안전감독이 있어야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타율성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재해감독기관의 안전감독이 기업의 경영자들이나 현장책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이들 기관의 안전감독이 있어야만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강제적으로라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李교수는 재해발생의 또다른 중요변수의 하나로 「조직상의 문제」를 들면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책임조직 및 책임자의 존재여부가 재해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와 관련李교수는 『안전책임조직 및 안전책임자가 별도로 존재치 않더라도 안전에 대한 책임이 현장감독등에 부과되어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안전이 유지돼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장감독에게 주어진 책무의 가장 큰 부분이 빠른 공기와 저렴한 공사라는 기업의 이윤성제고에 맞추어짐에 따라 안전의 문제까지 심도있게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

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李교수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설 재해예방을 위한 몇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우선 현 국내건설안전 수준에 비추어 개개 기업의 능동적인 산재예방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의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중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인 의미의 감독 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경영환경을 압박함으로써 기업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이와 관련, 사고가 많은 기업이 보험료 부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금을 연금식으로 징수하는 방식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설업 특성 중 하나인 고용의 불안정성이 원·하도급자간의 불완전한 연계상태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상황에서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등 안전관계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안전예방활동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산업안전신문 5월 30일자〉

(이 흥 교수의 위 논문 다음 호('94. 가을) 본협회지에 수록 예정)

## 서류작성 · 실제안전조치 서로 다르다

—공단 · 안전학회 주최 건설재해예방 세미나서 밝혀—

국내 많은 건설현장들이 자신들 스스로 작

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각종 서류상의 안전조치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 자문관인 독일인 조스트 씨는 지난 1일 산업안전공단 · 산업안전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건설재해예방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스트 씨는 지난 3월 중순부터 한달간 서울 · 부산등 5개지역 17개현장을 순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대부분의 현장에 안전조직도가 작성돼 있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등 각종 서류들이 구비돼 있으나 실제로 현장을 둘러본 결과 서류상의 사항들과 현실이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조스트 씨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들이 전반적으로 정리정돈이 제대로 돼있지 않아 통로확보가 미흡하고 비계설치상태가 불량, 재해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의 경우 작업발판이 너무 얇고 겹치는 면이 좁아 추락재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적절한 자재확보와 규정준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조스트 씨는 또 『이같은 위험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관리 · 감독자들이 안전에 관한 임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전담 안전관리자와 함께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뒤이어 발표에 나선 공단 자문관 엔데안 씨는 『안전업무 담당자들은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설계, 구매, 건축부서들과 안전 · 보건 및 환경문제에 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설계단계에서 안전측면이 우선적으로 고려될때만이 공사진행 전반에 있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지침들을 소개했다.

〈산업안전신문 6월 6일자〉 ■